

金大中 政府의 構造調整 批判⁽¹⁾

金 秀 行

이 글은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정부가 IMF로부터 특별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전개된 여러 가지의 구조조정 조치를 민중의 시각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구조조정은 재벌, 기업, 금융, 노동, 공기업, 대외부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구했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 조목 비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철학을 비판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1. 머리말

IMF신탁통치가 한국 사회에 고유한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개조론과 사대사상(=미국숭배론)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것에서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국식 약육강식 자본주의와 카지노 자본주의가 한국 경제의 뼈대를 무너뜨리면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던 전통적인 금융구조를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미식 금융구조로 혁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난과 은행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했고, 증권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모한 한탕주의가 국민경제와 국민정서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멧들게 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절약을 강조하는 바람에 대규모의 해고가 발생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임시직·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공동체적 단결과 연대성을 통해 이룩되던 노동생산성 향상은 사라지고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 반목과 불신 및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경제 면에서는 개방과 자유화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언제 단기성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주가폭락과 외환위기를 겪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구조조정정책들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그 철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2000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2. 1997年 12月の 恐慌: 資本主義 體制的 問題

미국 승배자들은 미국 경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황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또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은폐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공황이었고,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름) 뉴욕증권시장의 주가폭락은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물론 한국 경제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위기를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나, 연줄(cronyism) 또는 연고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면 한국 경제의 뿌리를 개혁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1997년 12월의 공황을 자본주의 경제 일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주의 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현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스스로 경기순환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성장 발전하고 있다. 동종 산업 안이나 이종 산업 사이에서 자본들의 경쟁은 생산과 소비와 투자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어느 시점에서 경제 전체를 거대한 恐慌(crash)으로 몰아 넣는다. 더욱이 산업자본들의 경쟁이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신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호황기의 규모 확대는 더욱 거대하게 되어 공황기의 규모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하며, 산업자본의 도산은 금융산업의 도산을 야기하여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게 된다. 이 소용들이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 남아 시장을 독점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 시장, 제품과 원료, 노동조직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97년 12월에 폭발한 한국의 공황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동남아와 중국의 기업들에 밀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의 기업에 밀리던 한국의 기업들(특히 대기업들)이 1990년 초부터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외국은행들은 한국 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해 한국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 거대한 자금을 대출했고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 가격과 판매량이 기업들의 예상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잉투자, 과잉설비, 과잉채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1996년 하반기부터 전경련에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1997년 초부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등 대기업들이 퇴출(매각, 합병, 법정관리, 화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퇴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게 부실채권을 누적시키고 손실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도산 위험성에 직면하여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오래된 신용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업의 퇴출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은행들이 대출 기한의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며, 외국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팔아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기업, 은행, 제2금융권이 외채상환만기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특별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12월 3일 받게 되었다.

이처럼 간단하게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에 의해 1997년 12월의 한국 공황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가 경제정책(재정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의 실시, 공기업의 소유와 출자, 각종의 인허가, 경제활동의 감독을 통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황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의 개입방식에 의해 악화되어 공황을 앞당기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97년말의 공황을 낳은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부가 잘못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예: 삼성자동차, 한보철강)를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실시하면서 금융거래(특히 대외단기자본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과시하려고 환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정부가 대마불사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줌으로써 대기업들은 과잉투자에 매진하고 금융기관들은 과잉대출을 꺼리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공황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여,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황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모든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공황에 부딪힌다면, 구조조정의 진정한 방향은 경제의 운영 목표를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경제에서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즉 수익성에 얽매어 호황기에는 무모한 과잉 투자를 하고 불황기에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대

외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임금 억압을 시도한다면 세계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도 수출 확대를 통해 고용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3. IMF의 特別 救濟金融: 벼랑 外交의 必要性

1997년 12월의 공황은 외환 부족과 환율 폭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형태를 띠면서 폭발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스스로 외채상환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금융기관과 기업은 당연히 外債支拂不能(default)을 선언하게 되었을 것이고, 채권외국은행 중 몇몇은 큰 손실을 입고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 도산했을지도 모르고, 국제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특히 대출시장은 각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매기느라고 크게 축소되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19세기의 국제금본위제에서는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에 대한 믿음과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국제간의 대차관계는 청산되었다. 따라서 외국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일부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한국정부나 IMF는 시장에 맡겨 두지 않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채 상환에 개입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모든 외채 원리금 상환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떠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 외국은행의 단기차관을 장기로 전환시키는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국제금리보다 매우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IMF와 외국은행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정부는 최대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고, 국민들은 실업과 생활수준 저하 등 큰 고통을 겪었다.

IMF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국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에게 외채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라고 강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채지불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원리금의 탕감이나 상환기일의 연장을 협상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외채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외채지불불능을 선언하면 외채의 원리금이 곧바로 채권외국은행의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계상되어 그 은행은 몰락하기

때문에, 채권외국은행은 외채지불불능을 선언하지 않도록 애원한다.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등. 이것을 외채의 調整(rescheduling)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 대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은 채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고 대출을 계속하면서 워크아웃트를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사실상 외국은행들도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과잉대출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한국 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예상하여 거대한 금액을 대출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IMF, IBRD뿐 아니라 국제신용조사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 & P)도 은행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에게 옳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IMF와 미국정부가 외국은행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 지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97년 12월의 공황은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은행들은 IMF와 미국정부가 대신 받아 주리라고 믿고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무리한 대규모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정부는 IMF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첫째는 IMF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감히 협상할 수 있는가, IMF나 미국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면 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대사상 때문이었다. 이 사대사상은 정부관료, 정치인, 지식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퍼져 있었는데, 일부는 친미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부는 무지 때문에 그러했다. 둘째로 1997년 12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의 절정기여서 여당의 후보나 야당의 후보나 모두 미국정부나 IMF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IMF는 대통령 입후보자들 모두에게도 협정 내용을 보증하는 서명을 요구해서 받았다. 셋째로 정부나 정당의 엘리트가 국민이나 민중의 이익이라는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4. 金融構造의 革命 追求: 銀行 中心에서 證券市場 中心으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계가 주로 은행에 예금하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성장했다. 이리하여 기업(특히 대기업)은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장기적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는 기업을 계속 지배할 수 있었다. 그 반면에 기업은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가 너무 커서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과 은행이 동시에 파산할 위험성이 컸다. 그리하여 대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증권시장의 육성에 힘썼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탕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항상 투기장이 될 뿐 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창구가 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정치군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증권시장을 한동안 투기열풍으로 몰아 넣어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을 수탈했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그 뒤 침체에 빠졌다. 증권시장은 노름판이고 잘 하면 대박을 얻을 수 있다는 한탕주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어 어떤 좋은 소문에도 증권시장은 잠깐 동안 과열되지만, 곧 주가가 폭락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잃은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을 떠나기 마련이다. 1997년 이전에도 정부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여 대기업들의 거대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투자신탁회사에게 증권 매입을 독려하여 주가를 인상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한탕주의를 자극했다. 그러나 주가는 결국 해당 주식회사의 장래 수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폭락하기 마련이다. 정부의 지시에 순응한 투자신탁회사는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그 투자신탁회사를 회생시키게 되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증권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지만, IMF 신탁통치 아래에서는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생겼다. IMF가 대기업의 부채/자본 비율을 감축할 것과 은행의 자기자본/위험대출 비율(BIS비율)을 8%까지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여, 대기업과 은행이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활성화는 외국자본에게 유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외환을 유치한다는 측면이 컸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대주주가 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정부는 2000년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투기열풍을 일으켰지만, 그 뒤 곧 투기적 거래가 몰락하고 증권사, 연금공단, 금융기관, 기업, 가계 모두가 손실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는 한국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주주는 자기의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인수와 합병이 어렵다든가 기업의 경영실적이 곧바로 시장에서 평가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은 불확실성이 큰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국민경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가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

5. 外國資本의 優待: 海外 賣却과 投機的인 短期資本의 問題點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대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DJ 스스로 투기꾼 소르스를 접견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국투자자들의 환심(또는 신뢰도)을 살 수 있는가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목적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의 증대에 있다기보다는 외국자본의 도입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외환 부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외국의 상류인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오해받게 된다.

제일은행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정부가 수용한 조건들은 너무나 불리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제일은행을 파산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제일은행의 채무를 갚기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외국투자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앞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그것도 (합의한 조건에 맞으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런 헐값 매각은 그 뒤의 모든 매각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매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은행이나 대우자동차의 매각 협상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매각 협상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외국투자자들의 약속을 너무 쉽게 믿는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는 결코 현재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정부나 채권단이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외국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증식을 목적으로 하지 국민의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해고할 것인데, 경제에서 외국자본의 지배가 커질수록 정부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점점 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국의 대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가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문을 닫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에게 거대한 금액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 대기업을 차지하는 산업상, 고용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국자본가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외국자본가가 '매우 無理한' 요구를 해온다면, 정부와 여당은 당면한 선거 때문에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영국에 투자한 미국계 자동차회사(크라이슬

러)는 공장 폐쇄를 구실로 영국정부로부터 거대한 지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 국내의 은행이나 기업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의 이익이 사대사상과 시장주의 때문에 과대하게 평가되고, 국가 소유나 공공 소유의 비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공기업 중 일부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 때문에 경영이 부실해진 것이다. 공기업이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책임경영을 실시한다면, 거대한 공적 자금을 국민들의 재산과 고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외국투자자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심해지고 있다. 지금 증권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자본인데, 이러한 외국투기꾼들이 금융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외국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몰려 나가는 데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투기자본이 예컨대 약 500억 달러라고 하고, 이 규모의 자본이 갑자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탈출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외환보유고로서는 환율의 폭등과 외환 부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또다시 외환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외국 송금이 자유화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자유화를 추진하는지, 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南韓 大衆의 犧牲과 北韓에 대한 同胞主義: 矛盾의 激化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부자들의 투자능력을 북돋우고 투자의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적나라한 치부욕을 자극했다. 몇 개의 정책을 살펴 보자.

첫째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종합금융소득세 등의 실시에 철저하지 못했다. 이 제도들은 사실상 부정부패의 방지와도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김대중 정부가 부정부패의 방지에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여당이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거대한 정치자금이나 계속 폭로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면, 김대중 정부도 별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40년 이상의 야당 생활에서 가신들의 고통이 심했을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고위층이 뇌물을 받아 구조조정의 내용을 바꾼다면, 어느 누가 뇌물을 바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뇌물 규모만 커지면서 구조조정은 아무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노사정위원회를 자본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결국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에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등과 교환한 것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켰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노동자)로 지위를 강등시켜 임금을 인하하고 고용에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한다는 사고방식은 참으로 한심하다. 나란히 함께 정규직 노동자로 동일한 임금과 대우를 받던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파견근로자가 되어 매우 낮은 임금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협조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연대성을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더구나 한국 풍토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본식의 종신고용이 노동자들의 애착과 헌신을 끌어내는 방식일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은 주인이 없어서 부실하게 되었으므로 구조조정의 핵심은 주인 찾아주기이어야 한다는 철학은 금융기관과 공기업 모두 외국인에게 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을 매입하려면 거대한 자금을 가져야 하는데, 재벌과 외국투자자 이외에는 이러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재벌은 이미 구조조정의 대상이므로 외국투자자들만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이나 서울지하철이 주인(대주주)을 찾았다고 하자. 이 대주주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인가? 공기업을 매입하는 민간자본은 이윤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매각 조건이 이윤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공기업의 공익성은 민영화와 더불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빈민과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엄청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거나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거나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10월 1일에 실시한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서는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우순은 일이 벌어졌으며, 과거 생활보호를 받았던 대상자보다도 40여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대중에게 적자생존을 강조하고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을 전가하면서, 대북 정책에서는 북한 인민의 빈곤에 동정하면서 경제력에 넘치는 원조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는 결코 오래 계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남한의 대중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인데, 아직 정부는 이 점에서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방비나 대북 관련 사찰비를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출 삭감으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소규모의 직업군인제를 실시하면서 국민개병제를 철폐한다면, 청년들의 연구역량과 민주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과학입국과 민주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국방비를 삭감하여 인민의 생활 개선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노동인구를 활용하는 것에 착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노동자를 남한의 노동자처럼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 북한 자체의 시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북한 정부가 남한 자원을 몰수해 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 公的 資金: 既得權層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해 國民이 犧牲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거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주식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순자산은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부채가 더욱 큰 경우에는 주주들은 책임이 없고 채권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특히 금융기관의 손실과 도산은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출과 업무정상화에 거액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지금 대체로 100조원 정도를 투입한 것 같은데, 이 규모는 내년의 정부 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적 자금이 누구를 위해 지출되는가라는 것이다. 파산한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의 잘못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부실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이나 그러한 대출을 지시한 고위층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대주주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국민들의 혈세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소유는 국가소유가 되더라도 관리나 경영은 정부가 임명하는 경영자보다는 이해당사자들(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전문경영자 등)이 담당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임명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이나 은행의 전문가가 아니든지 전문가인 경우에도 기업이나 은행의 경영을 혁신하기보다는 임명자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 혈세를 내는 국민들을 공적 자금을 받는 기업이나 은행의 경영에 참가시키는 방식이 새로운 경영문화와 산업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맺음 말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크게 희생시켰지만, 그렇다고 자본가들이나 중산층의 이익이 크게 향상된 것도 없다. 주식 투기 붐을 통해 중산층에게 돈 버는 재미를 주어 중산층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가 주가 폭락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정부의 비판세력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끝없는 부정 부패의 소용돌이 — 예컨대 1999년 일 년 동안을 끌어온 옷 로비 사건, 앞으로 일 년을 끌고 갈 한빛은행과 동방신용금고 사건 — 는 김대중 정권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대통령이 너무 똑똑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실권이 없고 여당 대표도 실세가 아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어 독재정부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기에 야당을 지켜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대통령이 된 지금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더 하락하는 상황, 대통령 혼자만 실세인 상황,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장래를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현재와 같은 대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개혁 정책을 재빨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4

팩시: (02)886-4231

E-mail: soohaeng@plaza.snu.ac.kr